

#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준비하며

안충영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냉전체제 속에서의 경제 도약

**인**류는 지금 새 천년으로 넘어가는 영겁의 한 전환점에서 희망과 기대에 부풀고 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새 밀레니엄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민족 분단이라는 냉전체제의 유산을 정리하지 못한 채 새 천년을 맞이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평화와 선린 우호를 國基로 삼아왔던 단일 白衣民族이 동서냉전체제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것은 실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것도 타율에 의한 민족 분단의 시작이 이제는 자율에 의한 민족 분단으로 변질되고, 중무장된 미사일 기지, 철조망, 지뢰밭, 그리고 한 핏줄의 병사들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DMZ가 새 천년의 전환점에서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남보다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지난 반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시련과 고통의 역사였으나, 우리는 분명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동양 문

화권에서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반복하였으나 우리는 한민족 고유의 문화적 독창성을 견지하면서 지난 40여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최빈국의 위상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동아시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중심 발전 모델에 따라 先경제 개발 전략을 구사한 우리는 1997년말 IMF 관리 경제라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봉착하였다. 같은 시점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동시 창달이라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 가치를 걸었던 정치 세력을 우리 역사상 가장 민주적 방식에 따라 우리의 집권 세력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개발년대의 고도 성장 패러다임을 21세기 지구촌 경제와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변혁하면서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다.

## 지구촌 경제와 정보화 세기

새로운 천년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지구촌 경제와 정보화시대의 의미를 적극 수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구촌 경제와 정보화시

대는 상호 상승적 작용을 하고 있다.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상품 서비스의 교류에서 무국경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는 동일한 공準(level playing field)에 의하여 한 지붕 경제권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다. 지구촌 경제와 정보화 세기만이 가질 수 있는 전파의 위력과 도도한 물결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에도 분명히 찾아갈 수밖에 없다.

새 천년의 벽두부터 WTO의 뉴라운드 협상 의제는 경쟁, 투자, 환경, 노동, 기술, 정부 규제, 부패 등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경 무역의 장애 요인을 축소하는 저층적 통합에서 국제 무역의 장애가 되는 모든 국내 요인을 제거해가는 심층적 통합(deep integration)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화시대라는 대변혁의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는 당당히 세계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에는 정보화시대가 본격 전개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어 다원화된 복합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구촌 사회(global village)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지금 한국·중국·일본이 정보화시대의 촉진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을 따라 잡으려는 일본의 정보 인프라 구축 노력, 상해를 금융과 정보의 아시아 메카로 발전시키려는 중국, 21세

기 지식 기반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의 설계는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북한 영역에도 분명히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실시간 무국경으로 비상할 수 있는 전파와 정보의 위력은 북한체제에도 투과될 수밖에 없다. 정보화와 개방화의 세계적 조류 앞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인간 본연의 심성은 북한의 교조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충분히 용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언제, 갑작스럽게 혹은 순리에 따라 일어나느냐의 문제만이 남아있다.

###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추진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난 후 프랑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인류가 지향하는 역사의 종착역으로 갈파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대중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동시 창달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것은 문명국으로서 정치와 경제시스템의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체제가 도약기(take-off)를 넘어서 1인당 소득 증대와 함께 성숙 단계로 진입할 때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상호 보완 관계로 나타난다. 옛 경제기획원(EPB)의 소수 엘리트에 의존하는 정부주도형경제체제는 도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內資 동원과 전략 산업 육성 등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나, 성숙 단계에 진입하여 나타나는 경제 구조의 다원성과 복잡성은 시장의 보이

지 않는 손만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서 책임 정치의 기본 이념이 있는 것처럼 경제 행위에 대해서도 상벌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집권 세력의 국가 관리 능력이 무능하고 그 실적이 저조할 때 국민은 투표를 통하여 집권 세력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책임 정치의 요체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는 정치권의 권력 남용을 예방하고 정치적 실정의 피해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정권 교체를 국민은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경제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 경쟁의 보장을 그 생명으로 한다. 이것은 경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경영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을 국가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온존하고 그러한 관행이 묵인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추방되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는 공정 경쟁을 통한 공정 보상보다는 편법·뇌물 등의 방법으로 특혜를 통한 私益 극대화의 지대 추구 행위(rent seeking activity)를 관행화하여 총체적 부실을 초래케 한다. 따라서 시장 경제의 요체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투명한 경쟁 여건이 구비되어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자신의 창의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가는 데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이념을 동북아에서 광역적으로 정착시키는 데는 중국의 향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전환기체제를 지니고 점진주의 방식에 따라 시장 경제의 요소를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정치체제에서 민주주의 요소는 省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 계획의 자유 경쟁과 이해 충돌의 발생 시 타협과 양보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중국은 주장한다. 단일정당제도 하에서 각 省 사이의 이해 충돌을 타협과 협상으로 조정하여 全人代에서 타결하는 중국식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한다.

21세기 초반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정상급의 경제 대국이 되는 중국에서 사회주의에 순치된 혁명 세대가 전면 퇴장되고 새로운 세계관에 입각한 새로운 지도층이 세계주의 안목으로 중국의 대외 관계와 국내 정치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제도를 훨씬 앞서 완성한 한국과 일본과 함께 글로벌화 이념에 충실한 중국의 지도체제가 등장할 때 북한체제는 외압에 의해서도 개방체제로 변모될 수밖에 없다.

## 동북아의 잠재력

동북아에는 후진의 위치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을 '캐치 업'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 일본, 신흥공업국의 선두 주자 한국, 그리고 근대화와 고속 성장을 개방체제로 선회한 이후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인구 대

국인 중국이 위치하고 있다.

중국의 내륙 개발과, 2010년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 및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진행하는 경제 근대화·개방화는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 확대 국면을 아시아 경제 전체에 가져다 줄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각종 투자 사업은 수백조 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사회간접시설 투자 자체만으로도 방대한 역내 시장이 형성되고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존재할 것이다.

후쿠야마는 “신뢰가 충만한 사회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다. 그런데 동양 사회는 약속을 위반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심리 성향이 있어 여기서는 자본주의 문화가 꽃을 피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F. 후쿠야마(1996)). 서구 사회에서는 약속이라는 것은 모두 법조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반면, 동양 사회는 오랫동안 농경 사회 문화가 정착되어오면서 굳이 법조문을 들지 않더라도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온정적인 차원에서 약속을 이행해왔다. 그러나 동양적 신뢰 문화가 경제의 근대화와 더불어 속물화·퇴영화의 길을 걸으면 서구 사회와 같은 효율을 발휘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시아 사회가 신뢰의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신뢰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빨리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동아시아의 유교권이 제시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초월경적이고 초공간적이고 또 적어도 서구적 물질 문화의 잣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철학적 배경도 내포하고 있다. 다만, 급속한 자본주의화 속에서 전통적 아시아적 가치가 퇴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단절하고, 새로운 승화를 해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퇴영화된 가치가 아닌 전통적 아시아의 문명사가 내재한 가치는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동양적 가치 가운데서 공통체 의식, 충효의 사상, 정직 등은 계속 개발되어야 할 개념이다. 한국인들의 전통적 선비 정신, 논어의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즉,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데 즐거움이 있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배움에 대한 갈망 등은 세계의 어떤 민족에게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학습 지향의 문화체계에 오늘날 국제금융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투명성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배가하면 21세기에 경제 선진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지식 기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 문화·문명국 비전

한국인들은 가난의 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동안 집요한 물질적 부를 추구해왔다. 그 결과, 규격화 제품의 대량 생산과 저임금을 기초로 한 중상주의형 해외 시장 공략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개발년

대에는 막스 웨버가 말한 천민자본주의적 행동 양식에 우리는 익숙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선진의 대열에서 세계의 문명 선진국과 동일한 도덕적 기초 위에서 국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상주의형 부국강병의 논리가 아니라 인류 공영과 공존의 경제 의식을 우리는 지녀야 한다. 이기심의 발로가 예정 조화에 의하여 사회적 부로 직결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논리는 지구촌 경제 구조에서 도덕률을 지녀야 한다.

환경 친화적 생산 양식은 남의 생존 조건을 염두에 둔 이타심을 작동시킬 때에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타인의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타적 가치 부여가 이윤 극대화에 앞서 일어나야 한다. 앞으로 무역과 환경, 무역과 경쟁, 무역과 노동, 무역과 기술 등 이른바 신다자간 협상이 WTO에서 본격 논의될 때, 그리고 OECD 회원국으로서 이타적 심성에 입각한 경제 윤리 의식이 생활화되어 갈 때 선진국들과 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도덕적 國格을 갖추게 될 것이다.

최정호 교수의 지적대로<sup>1)</sup> 후진국이 되는 조건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나 선진국이 되는 조건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외적인 요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선진국은 문화와 경제가 앞선 나라로 정의할 수 있다. 경제보다도 '문화'의

선진성이 보다 오래되고 근원적인 선진국의 요소이다. 최 교수는 선진국의 요건으로 공업화,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정의의 실천을 지적하고 있다. 21세기에는 우리나라는 바로 선진국의 모든 자격을 갖춘 나라로 성장하여 지구상의 인류 전체가 보존하고 가꾸고,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격을 갖추어야 한다.

### 동북아경제협력체제와 남북한 상호 협력의 필연화

동아시아의 고속 성장 국가들이 IMF관리 체제에 몰입되면서 동북아의 인접 국가간의 경제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금융의 글로벌화 현상이 각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얼마나 높여주고 있는가는 엔화, 위안화 그리고 원화 사이의 환율이 지니고 있는 민감한 연관 구조에서도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위기의 전염 효과가 동아시아 지역에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험을 하였다. 국경을 넘어서 무역과 직접 투자 및 증권 투자의 교류가 심화되고 상호 의존적이 되면서, 한 나라에서 일어난 거시 변수의 급격한 이탈 현상은 인접국으로 즉시 전파될 수 있는 시스템 아래 우리는 살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거시지표 등 경제의 기초 여건 특

1) 최정호(1996), "선진국으로 가는 길: 그 조건과 과제", 『韓人, 삶의 조건과 미래』, 나남출판.

히 외환 보유고, 환율, 금리 등 금융 변수의 실상을 적기에 상호 공개하는 장치를 강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적기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거시경제 변수의 사전 조율과 사전 공시를 위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경제각료 회의를 상례화하는 것부터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금융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적기에 진화할 수 있는 '아시아통화기금'의 창설과 APEC보다 진일보되고 더욱 빠른 동북아시아자유무역지대 창설과 대장정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근 마닐라에 개최된 ASEAN과 한·중·일 정상 회동에서 동북아경제권 태동에 관한 연구를 논의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은 세계 최대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 압축형 고속 성장에서 발생하는 도시화 문제군, 세계 최고속의 에너지 소비와 식량 소비, 고도 공업화에 수반하는 환경 파괴 등 공해 문제 등이 21세기에 본격 등장한다는 점이다. 한·중·일·극동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一衣帶水化 되어가는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공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경제 협력의 햇살은 한반도에도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포용 정책에 의하여 서광으로 변모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된 이후 금년 11월 18일까지 14만 3,000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북한의 서해 지역에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공단 건설이

논의되고 있다. 남북한의 자연 입지와 공간 체계는 物流·人流·金流의 흐름이 자유로울 때 천혜의 순기능을 한민족은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 가족의 상봉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한민족은 인류 문명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지난 50여 년 동안 북한의 일방적인 군사적·외교적 돌출 행동을 오랫동안 경험하였다. 북한의 돌출 행동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위해 첨단 과학 장비로 무장하여 방어적 공존체제는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중국·일본·미국·러시아를 포함하여 동북아 대통합의 장정에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게 윈-윈의 공생 효과를 주며, 문명국으로서 한민족의 인류사적 소명을 수행하는 聖業으로 남북한이 공명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한 관계의 기복이 일어날 때마다 一喜一悲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선진 문명국의 입지에서 꾸준한 남북한 협력 구도를 펼쳐가야 한다.

동아시아의 세계 최대 인구 밀집 지역, 에너지 소비 지역, 공해 발생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는 도시화 문제군과 한반도냉전체제의 종식은 주변 4강의 대국주의나 헌팅턴 교수의 '문명충돌론'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동아시아가 안고 있는 심각한 21세기 문제군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적 공생 운동을 인류애와 인간만이 지니는 양심의 심성에서 전개해야만 한다. **統**